'환율 폭탄' 광주·전남 기업 영향은

中企 최악 자금난 … 생산비도 못건질 판

원료·연료 수입 업종 경영압박 심화

자동차·전자 등은 수익 개선 효과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기업들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전자 등 달러 결제수입이 많은 업종들은 환율상승으로 적지않은 수익 개선효과를 누리고 있는 반면 원자재 수입 중소기업을 비롯해 정유·항공 등 원료와 연료 수입비중이 높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경영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 중소기업은 자금사정마저 비상이 걸린 상태다.

◇**원자재 수입 중소기업들은 직격탄**=환율상승은 원자재 수입비용을 끌어올려 중소업체들의 생산비를 높이는 한편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냉장고 부품을 생산하는 광주시 하남산단내 K업체 대표는 "페인트 제품을 비롯해 텅스텐·티타늄 등 원자재의 70%를 수입에 의존해 있는데, 원자재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300%까지 치솟아 매달 3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사업 다각화를 위한 설비투자는 커녕 직원들의 월급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유·항공업계 큰 부담**=GS칼텍스 여수공장은 원유 수입대금이 외화부채로 계산되기 때문에 환율이 10원 오를 경우 200억원의 환차손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의 실적으로 기록했던 GS칼텍스의 경우 올 말까지 환율급등과 정제마진의 약세로 인해 실적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연초 환율을 910~920원으로 예상했으나, 예상치보다 훨씬 넘게 올라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환율이 10원 오르면 연간 75억원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해외 사업장에서 달러화 수입을 확대하는 식으로 환율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으나,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오르면서 해외 여행수요마저 감소해 악전고투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자동차·전자 등은 수익개선**=자동차 업계에는 원화약세, 곧 환율상승이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지난해 34만5천대를 생산, 이중 23만여대를 수출해 수출매출은 전체의 2조9천900여억원을 기록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매출을 32억 달러로 계산할 때 평균환율이 10원 상승하면 320억원의 수출매출 상승이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달러 강세는 원자재 가격을 높여 차량 1대당 제조원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만큼 장기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출비중이 50%에 달하는 삼성광주전자도 환율이 10원 오를 때 연간 160억원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광주전자는 지난해 3조4천억원의 매출 가운데 수출로 1조6천억원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환율상승은 내수침체로 이어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중기 자금난**=국내외 자금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은행들이 돈줄을 죄고있어 지역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경기부진과 금융시장 불안이 기업의 수익성 저하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은행들이 경기악화에 대비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시의회는 7일 시의회 5층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의회 및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등산 조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고교 1인당 학비 전국 최고

초중고 해외 유학 1,054명·521명 최하위

교육과학기술위 국감

광주·전남지역의 조기 유학 열풍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심하지 않은 반면, 고등학교의 1인당 학비는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이 7일 배포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 초중고의 유학·이민 학생 수는 6만4천582명이었다. 이 중 초등학생이 3만1천900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인 49.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2만4천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만998명), 부산(2천971명), 대전(2천710명), 인천(2천631명), 대구(2천85명), 충남(1천359명), 경남(1천29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해 조기 유학 열풍의 진원지임을 실감케 했다.

광주의 유학·이민 학생 수는 1천54명으로 5개 광역시 중 최하위였고, 전남지역도 521명으로 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였다.

반면, 광주·전남 국공립 고등학교 1인당 연간 학비(기숙사가 있는 경우 비용 포함됨)는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올 광주의 국공립 고등학교 평균 학비는 418만5천200원으로 강원도 422만1천2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남의 평균 학비는 363만600원으로 전국에서 5위를 기록했다.

사립학교 학비의 경우 광주는 393만800원으로 강원(469만8천원)·충북(424만원)·전북(403만5천원)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학비가 비쌌으나 전남은 322만2천800원으로 11번째였다.

한편, 광주과학고의 올 1인당 학비는 844만4천200원으로 일반고등학교의 두 배 정도 됐다.

정 의원은 "조기유학 열풍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확산한 데 이어 지방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또한 특목고의 인기도 높아 학비가 일반고에 비해 2~3배 비쌈에도 불구, 높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공기업 적자 속 '성과급 잔치'

도시철도 등 임원에 1천만원~3천여만원 지급

행정안전위 국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등 광주시의 지방 공기업이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임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7일 배포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3개의 지방공사·공단 중 44곳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 동안 모두 2조2천73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 중 32개 기업은 지난해 21억4천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경우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최근 3년 동안 1천413억원의 적자를 기록, 적자 규모로 전국 5위를 기록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적자액은 82억이었으며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은 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적자 규모가 심각한데도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임원들에게 지난해 3천247만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1천186만원, 광주환경시설공단은 1천519만원의 성과급을 임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이 의원은 "공사·공단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는데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절한 경영평가를 통해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친환경 개발로 지역 경제 살려야"

"대표적 개발주의… 즉각 폐기돼야"

무등산 개발 조례 제정 찬반 공방

"주먹구구식 보호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보호 육성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개발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단견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

7일 광주시의회 주최로 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무등산 조례 관련 토론회'에서 무등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놓고 찬·반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는 못해 향후 조례안 처리 여부를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이철원(민주·북구 5)·송재선(민주·서구 1)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광주시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둘러싸고 이 의원 등 찬성측은 친환경적 개발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임형칠 광주·전남 녹색연합 공동대표 등은 "무등산의 역사와 현실, 관광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견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발제에 나서 "이번 조례를 발의한 목적은 무엇보다 무등산을 보호하자는 것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무공해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주먹구구식 보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무등산을 보호 육성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하자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반대측은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즉각 폐기돼야 할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등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수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대표적인 개발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단견"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례안의 문제점으로 '무등산 도립공원 조례'와의 중복·배치, 광주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역할, 광주시의 관광진흥과 배치되고 관광시설 중복 등을 꼽고 "조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무등산 어디에 어떤 종류의 관광시설이 가능할 것인지 밝히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필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반면 김홍주 광주시관광협회 회장은 "국내외에서 단체 관광객이 많이 와야 경제가 사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도 무등산을 찾을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3일 '광주시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뒤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시민공청회를 거친 뒤 다음 회기에 상정키로 하고 보류시켰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